

투데이 칼럼

원전 비소재지도 반드시 재검토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론화(公論化)의 성공 조건으로 통상 공론화 과정 및 운영주체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말한다.

그리고 토론과정의 속의성과 참여자의 대표성 확보가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다.

따라서 운영주체가 될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에 피해당사자이자 이해당사자인 비소재지측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그러나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이하 재검토준비단) 마무리 시점에서 재검토위원회 구성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은 지금의 재검토준비단 위 원구성(정부측 4명, 원전 소재지 5명, 환경측 3명, 원자력측 3명)과 동일하게 조직하는 안이다.

원전 소재지측은 원전별로 처한 입장이 다르므로 각 원전을 대표하는 5명이 재검토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함을 고수하고 있다. 2명으로 축소하여 배정할 경우에는 재검토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필자는 원전 소재지 5명이 재검토 위원회에 참여해야한다는 주장에



전민중 고창군 재난안전과 원전팀장

반대한다. 반대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원전 소재지 5명 참여 주장은 명분이 없다.

원전 소재지에서 주장하는 원전 소재지별 '다른 상황'은 핵폐기물 포화시점이 다르다는 것뿐이다.

원전 소재지는 행정협의회를 오랫동안 운영해 오면서 핵폐기물을 포함한 현안사업마다 일치된 목소리를 내왔다.

이제와서 '다른 상황'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원전 소재지 5명 참여 주장은 원전소재지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원전 소재지는 그동안 원전으로

피해를 보았으므로 중간처분장과 영구처분장 부지선정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재검토위원회에서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셋째 원전 소재지 5명 참여 주장은 재검토위원회를 불안정한 기구로 만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재검토위원회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전 비소재지측과 중립성이 검증된 인사가 반드시 적정수 참여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전 소재지 5명 주장은 현행법상 최대 15명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꼭 포함되어야 하는 상당한 인사 참여를 해방 놓

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제는 원전 소재지도 시대가 변하였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국가 전력 수급상 임시전식저장시설 설치가 급하다는 것을 불모로 유사적 행동을 보이는 것은 안 될 일이다.

더 이상 시대적 대의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국가 전력산업에 대한 원전소재지 공헌도는 공론화에서 충분히 고려하면 된다. 공론화 진행 과정에서 국민들은 이성적 판단으로 충분히 인정할 것이다.

재검토준비단도 마무리가 급하다고 하여 언 발에 오줌 누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악수(惡手)는 악수를 부른다. 공론화는 이해관계자간 균형이 잡혀야 한다.

균형이 잡힐 때 이해 조정도 가능하다. 균형이 잡힐 때 결과에 대한 공감과 승복도 이끌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해서라도 원전 비소재지측 대표가 재검토위원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향후 진행될 재검토 위원회의 균형 잡힌 설계로 핵폐기물 역사가 정의롭게 쓰여지기를 다시금 기대해 본다.

사설

도시재생 뉴딜사업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생각이 많은 요즘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중 하나이다.도내 대상지역은 전주가 2곳이고 정읍 김제 남원 부안 고창이 1곳 씩이다. 각 시군의 사업 성격을 보면 특색이 있다. 전주는 '중심사가지 살리기'와 '우리 동네 살리기'형이다. 정읍은 '공기질 제안형'이고, 김제는 '중심사가지 살리기형'이다.남원과 부안은 '일반 근린형'이고, 고창은 '주거지 지원형'이다.그러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북 발전을 위한 리모델링의 기회가 될 터이다.

전북도는 정부의 뉴딜사업 공모에 응한 결과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제 몫 잡기의 표본 같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반드시 좋은 성과를 보여주어야 했다. 정읍은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사업비에 전국적으로 50조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사업 기간 동안 있을 불가 인상을 감안해도 거대한 액수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전북의 예산이 아직 7조 원이 못 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힘을 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사업 성과가 좋아야 나중에 많은 액수의 예산을 더 태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도시 재생 사업이 너무 더디다. 다른 시군의 모범이 돼야 할 전주만해

도 그렇다. 시민들은 도시 재생 사업이 속도감 있게 전개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실은 답답함뿐이다. 아직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지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예산을 만들겠다고 공표한 게 수년 전인데 노송동의 선미촌은 옛 모습 그대로이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선미촌 입구에 예술촌 지도 안내판이 세워져 있는 것 뿐이다. 그리고 다가동의 선화촌은 오히려 숙박업소가 늘고 있다는 보도이다. 도시 재생이 추진되기는커녕 역행 당하고 있으니 어차구니 없는 일이다.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된 도내 각 시군은 정부가 사업의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고 말한 것을 상기해야 한다. 관계자들은 사업 추진 능력을 키워야 한다. 속되게 말해서 주어도 못 먹는 일이 벌어져서는 곤란하다. 저번에도 말했듯이 사업 추진 속력이 왕성해야 한다. 나중에 예산을 반납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이야기다. 그렇게되면 나중에 다른 광역자치체의 잔치판이 될 수도 있다. 서울시와 수도권이 '맞춤형 정책'으로 우위를 주고 있는 까닭이다. 전주시는 수년 전부터 가장 인간적인 플랜 50을 추진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그 플랜 50을 위해서라도 전주시는 더욱 열심히 내야만 한다.

독자제언

나의 작은 관심이 교통안전의 시작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 자신과는 관계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교통사고요인 중 안전운전 불이행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운전 중에는 항상 피속을 삼가 하고 안전운전 의무를 다함은 물론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몇 년간 교통사망자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경찰 미 신고 사고 건수를 포함한 도로상의 실제 사고는 증가해 왔으며, 전체 사고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단순접촉 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사고경향은 운전자의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같이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개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시민 교통안전의식향상을 위해 주요 교차로 및 교통사고다발 지역 중심으로 안전띠 착용 및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을 위한 교통 홍보와 지도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는 시민 스스로의 참여를 통한 교통안전의식 향상을 위함이나, 경찰이 보이는 주간시간에는 높은 교통법규 준수율을 보인다.

하지만 경찰단속이 뜬한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다시 낮아지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시민 교통안전의식은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선진교통안전의식이 정착하기에는 크게 미흡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시민 스스로가 안전운전 의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교통안전의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황수현 원주경찰서 흥진파출소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키신저 면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8일(현지시간) 방중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면담, 미중 관계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저출산 대책 문제 어찌되고 있는가

저출산 문제가 어찌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월잡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여대 진전이 없어 보인다. 그것은 전북도가 저출산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고민하고 있다고 말은 했지만 그게 다 변명을 위한 보고였지 싶다. 저출산 문제가 재앙 수준이라는 보도인데 아주 틀린 지적이 아니다.

전북도는 오래 전에 관계 전문가들과 민관협의체를 만들고 핵심과제를 선정해 그 이후에 행정력과 재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 후 감감 무소식이다. 정말이지 이대로는 지역의 앞날이 어둡다. 저출산의 고착화 때문에 '데드 크로스' 현상은 이미 2016년부터 있었다. 사망자보다 출생자가 많아 맞는 데 우리 지역의 경우는 그게 아니다. 아무런 저출산 시대라지만 익산 옹포면과 진안 주천면은 너무했다. 출생신고 건수가 각각 하나뿐이었

다니 말이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해결 전북도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불만은 그 근거가 없지 않다. 전북도는 다른 광역시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수 배워야겠다. 출산 문제가 이쪽보다 덜 심각한 다른 광역시도들도 5개년 출산 정책안이며 출산 장려 추진단을 조직하는 등 출산 캠페인이 활발하다는 소식이다. 전북도는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선 안 된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능동적인 모색이 필요한 오늘이다.

아이낳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 보다 차원 높은 출산 장려책을 내놓아야겠다. 올해들어 연말 평균 1524 명 꼴로 인구가 줄은 것이다. 출산 인구가 늘지 않고 있는 중에 고령화 고착 현상이 굳어지고 지금 전북도는 눈을 부릅뜨야 한다. 예전에도 지적했거니와 거주 인구의 현실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늘고 있는데 산쟁이 울음소리는 꼭 그쳤으니 말이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Large advertisement for Jeonju Daily featuring a graphic of a ship on waves and the slogan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 platform for humans who bring courage and hope). It includes text about supporting local development and a subscription information box at the bottom right.